

해방공간의 박헌영: 공산주의의 한국화*

정승현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논문요약 |

이 글은 ‘민족주의의 중층결정’, ‘외래 정치이념의 한국화’, ‘공산주의의 한국화’라는 세 가지 틀을 통해, 첫째 해방공간의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이 펼쳤던 민족주의 논리, 둘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가 민족이라는 특수한 실체와 만나며 빚어지는 민족과 계급의 긴장관계, 셋째 이 문제에 대한 조선공산당의 인식 틀을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해방 이후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체제이념 혹은 대안이념으로 정착시키고자 했던 시도들을 ‘사회주의의 한국화’로 파악하고, 해방공간에서 조공이 민족주의의 담론과 수사를 빌려 자신을 정당화하고 우익을 비판하며 미래 민족국가의 주역으로서 인정받고자 했던 시도를 ‘사회주의의 한국화’의 제1차 국면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조선공산당의 민족주의 담론의 내용과 그 안에 담긴 내재적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문제의 기원을 「12월테제(1928년)」에서 찾았다. 결론에서는 이 틀을 해방 이후 한국 사회주의에 대한 통시적 분석에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주제어 | 사회주의, 공산주의, 박헌영, 해방공간, 민족주의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KRF-2009-32A-B00005).

I. 서론: 해방공간과 공산주의의 한국화

1. 문제의 제기

한국 공산주의 사상과 운동은 흔히 해방공간이라고 부르는 해방 직후에 만개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민족해방의 이념과 운동으로서 수용된 공산주의는 식민지 치하에서 엄혹한 탄압을 받았다. 1920년대 초반에서 30년대 초까지는 자신들이 발간한 잡지를 통해 활동공간을 제한되게나마 확보하였지만 압수·휴간·정간을 밥 먹듯 했을 뿐 아니라 그 파급효과도 한정적이었다. 반면 해방공간에서 좌익은 상당한 자유를 누리며 미군정 및 우파에 맞서 자신의 정당성, 민족국가의 비전, 우익 비판의 논리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해방공간에서의 공산주의 연구는 주로 역사학자와 정치학자가 담당해왔다.¹⁾ 전자는 운동사에 주안점을 두고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 혁명론, 국가건설론, 민족통일전선론 등을 많이 다루었다. 이에 비해 정치학자들은 해방공간에서 조선공산당의 노선, 신탁통치 문제, 국가건설 등 주로 실천 노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두 분야의 연구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조선공산당 노선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할애하며, 그것을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연구자에 따라 좌익에게 민족주의의 ‘정통성’을 인정해주거나(여현덕) 그들의 과도한 계급논리를 비판하면서 민족주의를 저버렸다고 비판(김남식)하거나, 혹은 그 실천노선 자체를 검토(정병준; 이미숙; 안태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담론 속에서 민족주의와 계급논리의 충돌에 주목하고 있지만, 해방공간에서 그들이 동원한 민족주의

1) 필자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좌파 이념을 통틀어 부를 때는 사회주의, 해방공간에서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르려고 한다. 국제 공산주의운동에서 나타났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은 조선(한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해방공간에서도 좌파는 자신들을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라고 호명했다. 둘 사이에 의미 차이는 없었다. 다만 해방공간의 사회주의를 지칭할 때, 다른 시기와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산주의로 명명한 것이다.

논리 그 자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지 연구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특정 부분을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 그 결과 공산주의자들의 담론에서 민족주의와 계급논리의 접합 방식, 민족과 계급의 충돌 지점과 긴장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 분산적 논의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민족주의의 중층결정’, ‘외래 정치이념의 한국화’, ‘공산주의의 한국화’라는 세 가지 틀을 통해, 첫째, 해방공간의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이 펼쳤던 민족주의 논리, 둘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가 민족이라는 특수한 실체와 만나며 빚어지는 민족과 계급의 긴장관계, 셋째, 이 문제에 대한 조선공산당의 인식 틀을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해방공간에서 조선공산당이 민족주의의 담론과 수사를 빌려 자신을 정당화하고 우익을 비판하며 미래 민족국가의 주역으로서 인정받고자 했던 시도를 ‘사회주의의 한국화’의 제1차 국면으로 파악하며, 그 안에 담긴 내재적 문제점을 계급과 민족의 긴장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서론에서는 먼저 이 개념들을 설명하고, 본문에서는 박헌영과 조공이 펼쳤던 민족주의 담론의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결론에서는 ‘사회주의의 한국화’ 역사를 개관하며, 이 개념을 한국 사회주의 사상·운동사의 분석에 확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논리를 총괄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모두 고려하기에는 필자 자신의 공부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해방공간의 박헌영으로 그 범위를 좁혔다. 박헌영을 꼽은 것은 식민지 공산주의의 흐름을 계승하면서 해방공간에서 조선공산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가 가장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박헌영이 한국(조선) 공산주의를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다. 잘못하면 그에게 과도한 대표성을 부과하여 그의 사상을 한국 공산주의 전체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할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보편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를 한국(조선)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에 적용하려는 당대 공산주의자들의 고민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또한 해방공간에서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박헌영을 정점으로 하는 조선공산당의 깃발 아래 집결하였으며, 「8월테제」를 비롯한 중요 방침은 식민지시기 이래 일관된 노선이었다는 점에서 큰 무리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다. 이 문제는 우파의 논리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더 설득력을 갖출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좌파의 논리만 다루었다. 자료는 박헌영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한정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선공산당(앞으로는 ‘조공’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관련 자료를 제한적으로 동원하였다.

아울러 이 문제는 박헌영과 조공의 활동, 미군정의 좌파에 대한 태도 변화, 그와 맞물려 나타나는 조공의 노선 변화 등 실천 측면과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기에는 주어진 분량이 허락하지 않고, 그 자체가 별도의 연구를 요구하는 대단히 광범위한 주제이다. 또한 조공의 실천노선과 미군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업적들이(대표적으로 서중석 1996) 출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박헌영과 조공의 이론 측면에 한정시키고자 한다.

2. 개념 틀: 민족주의의 중층결정과 외래 정치이념의 한국화

■ 민족주의의 중층결정과 외래 정치이념의 한국화

역사적으로 중심부는 세계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낸 불평등 공간을 적극적으로 침투하며 주변부를 제국주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주변부는 이 불평등한 공간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중심부와 맞서고 나아가 중심부를 따라잡으려는 투쟁을 전개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민족주의라고 부른다. 사상의 측면에서 볼 때 민족주의는 주변부의 전통 사상체계를 재발견·재구성하거나, 혹은 자신의 전통을 부정하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이념체계를 빌려와 완전히 새로운 이념적 기반 위에서 내부를 혁신하고 중심부와 대결하는 구도를 취한다. 어떠한 경로를 택하건 그 이면에는 중심부의 위협에 맞서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중심부를 따라잡으려는 민족주의적 동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전통사상인 유교가 ‘망국의 이념’으로 규정되었던 한국(조선)에서는 후자의 길을 따랐으며 그 배후에는 강렬한 민족주의가 있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전체 민족의 발전을 꾀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정치질서를 만드는 민족해방·근대화·민족국가건설의 이념으로서 수용되었다.

한국에서 서구 근대사상의 도입 자체가 민족주의적 동기에 의해 규정되었고, 한국 정치사상의 배후에는 민족주의의 선차성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외세침입과 국권상실의 경험으로 인해 민족주의는 오염될 수도, 오염되어서도 안 되는 일종의 성스러운 이데올로기로 군림해왔다. 또한 이런 위기를 거치며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로 응집된 종족 민족주의를 강고하게 발전시켜왔다. 다른 어느 이념보다 민족주의는 더 크고 무거운 정치적 상징성과 힘을 내포하면서 모든 정치이념의 공통분모인 동시에 모든 정치세력들의 정통성을 평가하는 원천적 언어로 정립되었다(하상복·김수자, 208). 한국에서는 그 어느 정치이념이라도 민족주의의 자장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으며, 민족주의는 가장 치열한 이념투쟁이 벌어지는 각축장이 되었다. 강정인은 이것을 ‘민족주의의 신성화, 민족주의에 의한 여타 이념의 중층 결정’이라고 불렀다(강정인 미출간). 필자도 이에 동의하며 그의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필자는 민족주의의 중층결정을 배경으로 외래 정치이념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대중을 장악하며 현실을 이론적·실천적으로 이끌어가는 체제이념으로 내세우려는 시도를 ‘외래 정치이념의 한국화’로 보고자 한다. 이것은 서구로부터 도입된 여러 정치사상, 예컨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한국인의 정치적·역사적 경험과 정합성을 가지며 한국인에게 친숙하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한국인의 정치적 문제의식에 맞게 각색됨으로써 한국정치를 이론적·실천적으로 주도하는 체제이념 혹은 지배이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정치이념의 한국화는 두 가지 조건이 합치될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한국인의 정치적 심성과 문제의식에 가장 호소력을 가지는, 한국인이 가장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친근한 언어를 빌려 사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에 도입된 외래 정치이념의 도입·전개·발전을 규정한 근본 조건이 민족주의의 중층결정이라는 사실에서도 보듯 그 언어는 민족주의의 틀을 빌릴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이 언어를 통해 그 시점에서 한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적 문제를 해석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 그 문제가 제기된 이유와 해결방안을 설명하며, 바람직한 미래 정치질서의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둘이 성공적으로 결합된다면 그 이념은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 사회정치질서 건설 방안, 미래 비전을 인정받음으로써 현실을 장악하는 이념으로 승인받

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 사회주의의 한국화: 공산주의의 한국화

‘사회주의의 한국화’ 역시 ‘외래사상의 한국화’의 일환이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에게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한국(남한)’이라는 시공간에 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궁극적으로는 지배이념으로 올라서고자 했던 이론적·실천적 시도를 말한다.

한국 사회주의 역사에서 사회주의의 한국화는 네 차례의 국면을 거치고 있다. 1차 국면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사회주의가 조선공산당이라는 이름 아래 ‘공산주의’로 자신을 내세웠던 해방공간이며, 그런 점에서 이 시기를 ‘공산주의의 한국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²⁾ 2차 국면은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웠던 조봉암과 60년대 혁신계, 3차 국면은 민주화운동과 맞물려 저항이념으로서의 기세를 올렸던 80년대, 그리고 민주노동당 이후 현재 통합진보당의 활동은 4차 국면에 해당한다. 각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문제, 사용 언어, 수사법은 달랐지만 외래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체제이념 혹은 대안이념으로 인정받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을 갖고 있다. 이 글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주의 사상의 전개를 관통하는 일관된 특징을 사회주의의 한국화로 파악하며, 그 첫 단계에 해당하는 해방공간에서 박헌영과 조공이 수행했던 구체적 작업을 밝히고, 그들이 당면했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해방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적 문제는 완전한 민족국가의 실현, 그리고 그 체제의 성격·방향·주도세력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좌우는 이 문제를 놓고

2) 필자는 식민지와 해방공간이라는 두 개의 시기로 나누지 않고 해방공간으로 통합하였다. 식민지시기는 이론의 잠복기 혹은 방향정립기로, 해방공간은 사회주의의 한국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글의 심사자가 지적했듯 식민지시기와 해방공간은 운동을 둘러싼 국내외의 객관적 조건도 달랐고 이론적으로도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두 시기를 무차별적으로 묶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지만 식민지시기를 통해 정립된 노선이 해방 이후에 조공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 해방 이후 조공의 노선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운동에서 탈락하거나 전향했다는 점에서 해방공간의 사회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민족주의를 매개로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좌우를 막론하고 상대방을 비판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 용어가 민족반역자, 친일파,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라는 사실에서 보듯 당시의 정치와 언어와 담론은 민족주의에 제한되거나 간혀 있었다. 특히 사상의 발생·개념·내용에서 한반도의 전통사상과 이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으며, 오랫동안 대중과 단절되어 있다가 비로소 대중을 동원하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던 해방공간의 그들에게 민족주의는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자원이었다. ‘공산주의의 한국화’는 다른 말로 하면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으로 도입된 사회주의가 해방공간에서 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 민족주의 담론과 수사를 활용하여 역사적 정당성을 확립하고 현재를 이끌어가며 미래를 만드는 체제이념으로 자리 잡으려 했던 시도를 말한다.

그런데 사회주의에는 근본적 난점이 있다. 계급이라는 단위를 근간으로 삼고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보편사상으로서의 사회주의는 민족의 가치를 가장 앞세우는 민족주의와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보편이념으로서의 공산주의는 민족주의와의 갈등을 내장하고 있는 이념이다. 해방공간에서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은 자신의 주장을 민족주의 담론으로 풀어내며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족국가의 미래상과 그 실천 방향을 내세웠다. 반면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최종 목표’와 그 실천방안은 사회주의라는 보편이념을 빌려 진행되었다. 즉 그들의 최종 목표와 실천 방안은 계급의 논리에 따라 설명되었고, 이것이 민족주의와 충돌을 일으키는 국면에 들어서자 계급실천을 택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던 것이다.

박헌영과 조공은 자신들의 주장을 민족주의 담론으로 풀어냈지만 구체적 실천 측면에서는 계급의 논리가 압도하였다. 중도파와의 통일전선조차 거부했고, 신탁통치나 미소공동위원회의 문제에서도 소련을 의식하며 당시의 민족주의적 열망과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갔으며 중국에는 극좌 모험노선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민족주의 수사와 계급적 실천의 괴리,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충돌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 ‘이미 해결된’ 문제로 인식되었다. 민족과 계급이 충돌할 때 그들은 주저없이 계급노선을 택하였다. 필자는 해방공간에서 조공의 기본지침이던 「8월테제」에는 계급논리를 근본으로 삼고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들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민족혁명과 계급혁명의 통일’이라는 조공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을 정식화한 코민테른의 「12월테제」에서 그러한 인식 틀의 기원을 찾았다.

II. 본론

서구 정치이념의 전개 역사를 보면 기존의 사회정치질서에 대항하는 이념은 저항이념 → 대안이념 → 체제이념의 순서로 진행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러 외래 정치이념을 동시에 수용했던 한국의 경우, 해방정국은 좌우가 모두 현실 정치를 장악하는 체제이념이 되기 위해 민족의 이름 아래 경쟁을 펼치던 시공간이었다. 해방정국에서 좌우가 가장 격렬하게 대립한 부분은 새롭게 건설될 민족 국가의 주도세력 설정, 그 국가의 성격, 그리고 민족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문제였다. 그중 마지막 부분이 제일 격렬하게 부딪히는 영역이었다. 한민족이라는 불가분의 실체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민족 이데올로기 안에서 민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입장을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한편, 반대세력을 반민족으로 규정하여 축출·제거하려는 이 투쟁과 갈등을 규정하는 근본언어는 민족주의였다. 좌우는 서로 민족의 신성함을 내걸고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하는 ‘애국자 경쟁’을 벌이며 상대방을 민족의 반역자로 매도하는 극한 대립을 벌였던 것이다. 경쟁에서 밀리면 그 이념은 ‘매국노’의 낙인이 찍힌 채 사상적·물리적으로 사라져야 할 운명이었다.

1. 민족의 신성화와 양심

사회주의는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으로 도입되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민족에 대한 논의는 빈약했다. 그들은 민족해방투쟁의 중요성을 인정

하면서도 민족에 대해서는 부정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이란 자본주의와 함께 발생·성장·소멸할 실체라고 하는 스탈린의 민족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1925년부터 민족통일전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며 민족과 민족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타협 노선으로 돌아서고 1928년 12월테제 이후 이른바 ‘계급 대 계급’ 전술의 지침이 내려진 후에는 그러한 관심마저도 사라지고 말았다.

1930년대에 들어오면 사회주의자들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우파의 고적보존운동, 민족문화진흥운동이 노동계급의 투쟁을 약화시키고 부르주아지의 이익에 옹호하며 봉건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에서 철저하게 비판하였다. 그때도 그들의 반대 논거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라는 공식이었으며,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붕괴의 혁명적 시기에 타도해야 할 이데올로기라고 보았다(이지원, 291-94). 민족주의의 중층결정이라는 바탕 위에서 도입된 공산주의가 ‘민족’을 처음부터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쩌면 해방공간에서 민족과 계급의 긴장을 해소하지 못하게 된 일차적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

해방공간에서도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당시 좌파 지식인들이 편찬한 『사회과학대사전』의 「민족」 항목 역시 스탈린의 민족 개념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족주의」 항목에서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았던 식민지·반식민지의 상황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의 사상으로서 진보적 역할을 했지만, 노동계급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로 나선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반동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이석태 편, 230-31). 이러한 내용은 ‘조선사회과학동맹 서울시 지부’의 이름으로 발간된 『주보(週報) 민족주의』 15호(1947년 4월)에 실린 「민족이란 무엇인가」에도 그대로 반복된다.

이런 이유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을 체계적으로 다룬 문건은 찾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해방공간에서는 그들 역시 공통의 언어·문화·혈통을 근간으로 하는 ‘원초적’ 민족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6.10만세운동 20주년을 기념한 방송담화(1946/4/20)에서 박헌영은 남북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조속한 수립을 강조하며 “우리 민족은 통일민족입니다. 결코 남북으로 양단될 수 없

는 민족(2: 348)³⁾이라고 하면서 분리될 수 없는 통일된 실체로서의 민족 개념을 당연시하였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조선일보에 기고한 역사학자 장도빈을 비판하며 “민족이 걸어오는 신성한 행적”을 어떤 주관적 의도에서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게 기록하면 “민족의 역사를 모욕하는 것(2: 216)”이라고 하면서 조선(한국)민족은 오염되어도 오염될 수도 없는 존재로 취급하였다. 더 나아가 당시 가장 열렬한 반공신문이었던 대동신문이 “민족의 분열을 파렴치하게 감행(220)”하고, “조선인 민족을 저급화하는 죄악을 범(239)”하였다고 비판하였는데, 여기서도 민족은 분열되어서도 저급해져서도 안 되는 하나의 성스러운 실체로 표상되고 있다.

해방공간에서 박헌영은 대중을 호명하는 단어로 ‘민족’, ‘동포’, ‘인민’이라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하나의 문건에서도 이 셋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하는 문건이나 연설에서는 민족과 함께 ‘동포’가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다. 1946년의 경우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결정을 지지하자(1/17)」, 3.1절 기념사, 「메이데이 기념사」, 6.10만세 20주년 기념 연설, 미발표된 방송용 원고(6/18) 등 대중을 상대로 한 연설이나 문건에서는 예외 없이 동포라는 말을 빈번히 사용하였다. ‘단일동포’, ‘동포들이여’, ‘3천만 동포들이여’,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이여’, ‘애국 동포들이여’ 등 다양한 변주를 거듭하며 동원되는 이 단어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민족보다 더 정겹고 원초적인 느낌을 준다. 구한말 이후 동포는 민족·국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사실상 동포는 민족과 같은 말로 볼 수 있지만(권보드래 2004), ‘해외동포’라는 말에서 보듯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동포애’라는 말에서 보듯 감정을 품고 있으며, ‘모두 다 같은 형제’라는 평등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지만, 무엇보다 그 정감어린 단어는 원초적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정치적 수사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박헌영은 우파를 비판할 때 민족반역자·매국노·친일파 등의 용어를 사용했

3) 박헌영이 남긴 연설과 문건은 모두 10권으로 출간된 『이정 박헌영 전집』을 사용하였다. 이 책의 권수, 쪽수는 (2: 216)식으로 표기한다.

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을 동포를 배신한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우익의 좌익합작 방안에 반대하는 「강제합작은 절대반대」(1946/8/2)에서 ‘금일의 우익 반동거두’ 들은 친일파로서 전쟁을 열렬히 지지하던 무리라고 하면서, “군(君)들이 양심이 있거던 동포이거던 좀 반성할 심사는 없는가?(2: 389)”라고 되물었다. 또한 정례 방송용으로 작성되었지만 허가되지 않아 『청년해방일보』에만 수록된 원고(「토지개혁은 민주독립의 초석」 1946/6/18)에서는 토지개혁이 실시되면 지주들도 일하게 됨으로써 ‘동족을 착취하는 버릇’을 내버리게 되어 “양심-가책을 받지 않고 참 인간이 되는 셈(2: 373)”이라고 하였다. 우리 문화에서 양심이 없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동포를 배신하거나 착취하는 무리를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 비난하는 데서 볼 수 있듯 우익을 비판하는 데 원초적 민족주의의 수사학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 수 있다.

박헌영은 하나의 문건에서도 민족과 인민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인민은 본래 계급적 의미를 탈색한 용어이지만, “오직 노동자, 농민, 소시민, 인텔리겐차를 포함한 근로대중만이 인민(박치우, 434)이라는 말에서 보듯⁴⁾ 당시 상황에서는 좌익의 독점 용어로 인식되었다. 동시에 박헌영과 조공에게 인민은 민족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조선인민보』에 수록된 기사(1945/10/11)에서 박헌영은 “조선의 전인민의 대다수는 노동자 농민 근로자대중이라는 의미에서 이 근로대중의 이익을 존중하는 정권이라면 조선 전민족을 대표(2: 647)”하는 것이라고 하며 인민을 민족과 일치시켰다.

인민과 민족의 등치는 조선공산당이 민족의 범주에 들어온다고 ‘인정하는’ 조선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 조선인민공화국 1주년 기념성명(1946/9/5)은 “민족의 9할5분을 차지하는 인민들(2: 431)”이 인공을 지지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인민이란 조공에 의해 동원가능한 사람, 조공이 민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한 사람들, 그리고 민족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과 계급의 이익을 하나로 일치시켜 민족 그 자체를 인민, 일반적으

4) 박치우는 해방공간에서 『현대일보』에 쓴 사설 가운데 직접 추려 자신의 책에 수록했다.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1946년의 글로 보면 될 것이다.

로 공산당이 동원하는 대중과 동일시하는 데 익숙했다. 그렇다고 계급정치와 민족주의 정치를 일관된 틀에 담아 논리정연하고 실천가능한 지침으로 만들어냈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인민’이 실제로 조공의 노선에 찬성하는지, 그들에게 동원 가능한 것인지도 별개의 문제였다.

이렇게 민족이 모독되어서 안 되는 신성한 그 무엇이라면 아무나 민족의 범주에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다. 『현대일보』 사설(1946/3/26)에는 조선공산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국가의 건설은 “단일동포로 구성된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 피에 맺힌 절대절명의 절규”라고 하며, “탐욕에 젖은 동족의 일부를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필코 전취해야 한다고 했다. 민족의 범주에서 배제되어야 할 ‘탐욕에 젖은 동족의 일부’가 누구인지는 명확했다.⁵⁾

2. 정당성과 애국자 경쟁

애국자 경쟁은 해방정국에서 조선공산당이 스스로를 애국자이자 민족주의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역사적 정당성을 선점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좌익이 해방공간 내내 자신의 존재 근거로 내세운 것은 ‘민족주의자’로서 투쟁경력, 그리고 ‘애국자’라는 사실이었다.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은 ‘모든’ 문건에서 일제강점기 민족해방투쟁 경력을 강조하면서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로 자처했다. 애국자의 수사는 좌익이 스스로를 민족사의 과거·현재·미래를 담당하는 정당한 이념이라 주장하고, 해방공간에서 핍박받는 애국자의 모습으로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장치였다. 또한 당시 한국인에게 가장 호소력을 갖는 민족주의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경쟁무대에서 탈락시키려는 의도를

5) 이승만 역시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방송연설(1945/12/17)에서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을 ‘나라와 동족을 팔아 사익과 영광을 위하여 인민을 속이는’ 무리, 파괴 선동을 일삼는 ‘극렬분자’, ‘노국(露國)을 조국으로 부르는 자’들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삼천만 남녀가 다 목숨을 내놓고 싸울 결심” 아래 비록 친부형이라도 “원수로 대우해야 할 것(국사편찬위원회, 612, 613)”이라고 하면서 민족의 범위에서 배제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갖고 동원되었다.

1945년 11월 30일 공산당, 국민당, 인민당, 한민당은 서울중앙방송을 통해 정견을 발표하기로 했고, 추첨을 통해 공산당이 제일 먼저 방송을 하게 되었다. 해방 후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자로서 최초의 방송연설이었다. 여기서 박헌영은 자신들이 일본의 통치 아래 “민족의 독립과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근로대중의 생활개선과 언론집회의 자유를 위한 반제반봉건적 민족해방투쟁을 부절(不絶)히 전개(2: 98)” 했음을 강조했다. 이 연설은 또한 자신들의 투쟁을 ‘민주주의적 자유와 발전을 위한 투쟁’ 이라고 하면서 계급적 성격을 희석시키고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투쟁정력을 강조하며 역사적 정당성을 내세우고 민족주의자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수사법은 끊이지 않고 이용되었다.

해방공간은 애국자들과 애국담론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공산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빛나는 투쟁정력’ 이라는 후광도 있었다. 1945년 12월 12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박헌영의 담화문(「하부통일은 착착 전진 완명한 우익정당이 방해」)은 민족통일전선과 임시정부 문제에 관한 공산당의 견해를 밝히면서 우익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필자가 찾은 바로는 ‘공개 기자회견’ 에서 박헌영이 공산당을 애국자로 내세운 것은 이 문건이 처음이다. 여기서 박헌영은 ‘반공 반소 국수주의자들’ 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온갖 ‘악행’ 을 저지르며 “진정한 애국자와 민족주의자들을(2: 115)” 탄압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을 ‘해방 조국에서 동족에게 탄압받는 애국자’ 로 그려냈다.

애국자 담론은 신탁통치와 미소공동위원회 문제를 놓고 좌우 대립이 극심해지는 국면에 오면 한층 빈번하게 동원된다. 그리고 애국자의 수사법은 ‘양심’ 과 결합되어 또다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른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좌우합작에 관한 의견을 밝힌 「민족통일의 3대원칙(하), (1946/7/14)」에서는 자신들은 과거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가장 많은 희생을 당했고, 오늘날에는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용감히 싸우며 조선 건국의 노선을 가장 옳게 세운 철저한 민주주의적 애국자 공산당” 이며, 자신들을 “반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2: 385)” 이라고 하였다. 이 문건은 과거와 현재의 공산주의자들을 애국자로

자리매김하고 친일파·민족반역자·반소반공 파시스트, 즉 우익을 임시정부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우익은 애국자를 탄압하는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되며 정치적·계급적 입장 이전에 인간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존재로 그려졌다.

민족의 수사를 광범위하게 동원했던 박헌영은 조공의 중요 정책을 ‘민족의 희망’과 ‘망국’에 연결시켰다. 자신의 노선은 계급혁명이 아니라 ‘민족의 희망을 가르는’ 위기의 순간에서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미소공위를 앞두고 중앙방송을 통해 박헌영이 발표한 방송원고(「조선임시정부수립에 대하여」 1946/3/12)에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마당에(2: 218)” 미소공위와 협력하여 임시정부 수립에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6.10만세운동 20주년 기념 방송연설에서는 모스크바 삼상결정의 충실한 이행,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 책동 분쇄,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동포들이여! 우리는 발전과 멸망의 역사적 순간에 놓여있습니다(2: 348)”라고 하며 자신의 노선에 따라줄 것을 호소했다. 심지어 1946년 8월 6일 하지에게 보낸 서한문(「남조선의 위기극복은 인민의 정권 파악」)에서도 “장군의 정책 여하는 우리 민족의 희망성쇠를 직접 영향하는 까닭(2: 400)”에 신중히 생각하여 일제에 맞서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던 애국자,” 그리고 “인민의 대표애국자들(2: 402)”이 만든 인민위원회에 정권을 넘기라고 촉구했다.

망국과 민족의 희망을 자기 노선의 정당화 명분으로 내세운 박헌영의 수사법은 남한 단독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극에 달한다. 남한 단독선거 거부투쟁을 촉구하는 남로당의 담화문(1948/4/3)에서 자신들은 단독선거라는 ‘매국 멸족’의 행동을 반대하는 ‘애국자’이며, “우리 민족의 멸망을 좌시할 수 없어(5: 351)” ‘정의의 구국투쟁’에 일어섰다고 주장했다. 역시 5.10 단독선거 보이코트를 호소한 허헌 명의의 반대성명(1948/4/20)에서도 5.10선거를 ‘망국선거’로 규정하며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야 한다(5: 645)”고 촉구하였다.

박헌영은 애국자·양심·망국·애국투쟁의 수사법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조선) 공산주의를 민족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조공의 노선과 행적은 애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고, 자신들만이 과거·현재·미래의 유일하게 정당한 세력임을 주장하였다. 일관되게 그들은 민족/반민족 친일파, 애국자/민족반역자라는

식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우익을 민족의 배신자·매국노·인간 이하의 존재로 몰고 갔다. 이 대조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치는 민족주의 수사법이였다. 최종적으로 이 수사법은 우익을 ‘조국과 민족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매국노로 묘사함으로써 방점을 찍었다.

3. 이승만과 우익 비판

스스로를 애국자로 내세우는 수사학은 우파를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매도하며 민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 박헌영은 처음에는 우파 혹은 우익이라고 하지 않고 ‘친일파’ ‘민족반역자’ ‘일제의 주구’ 등 민족주의적 수사법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하지와의 첫 만남(1945/10/31)에서부터 미군정청은 ‘친일파나 민족반역자’를 고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고, 이승만과의 회담에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요소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모조리 소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조공이 이승만의 ‘대동단결’ 통일전선론을 반대하는 일관된 명분이었다.

박헌영이 우파를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민족반역자일 뿐 아니라 낡은 식민지 봉건질서를 옹호하는 특권계급이라는 것이었다. 서울 중앙방송을 통한 조선공산당 대표 정건발표(1945/11/30)에서는 공산당은 민족의 통일을 주장하지만 “종래의 특권계급의 기본부대인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구성된 소수의 조선의 특권계급(2: 99)”과는 절대로 통일전선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46년으로 접어들면 공개적으로 계급적 입장에 따라 좌우를 구분하며 점차 우익에는 강한 계급적 의미가 결부된다. 미소공위 공동성명 제5호를⁶⁾ 적극 지지하는 기자회견(1946/4/18)에서는 “친일파 등 특권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반동정객들”이 “우익의 반동적 지도자(2: 713)”라고 하였다. 박헌영의 공개 기자회견에서 우익과 반동의 결합은 여기가 처음이다. 그 이후로 우익은

6) 기존의 찬/반탁 여부와 상관없이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임시정부 수립과정의 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성명이다.

반동과 결합되거나, 혹은 밑에서 다시 반동이라는 말로 부연설명을 한다.

반동은 해방공간에서는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주보 민주주의』 20호(1947/6/21)에는 「반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무기명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 기사는 ‘남조선’에서 ‘과거의 봉건적 토지제도를 고수하고 대기업의 사유를 주장하며 노동자·농민대중에게 정치적·경제적 평등과 자유를 주지 않으려는 일체의 세력’을 반동으로 규정하였다. 즉 우익은 낡은 사회경제적 제도를 유지하며 ‘인민’을 억압하려는 특권계급인 동시에 친일파라는 두 층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에 대한 비판은 조금 달랐다. 조공은 이승만에게 인민공화국 주석 직위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예우를 갖추고 자극적인 표현은 삼갔다. 1945년 10월 30일과 11월 16일 통일전선 결성 문제를 둘러싸고 박헌영은 이승만과 두 차례 회합을 가졌다. 이 회합에서 그는 중경 임시정부 봉대, 인공 거부, 대한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한국민주당의 대표자들이 참여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승만과 이미 화해할 수 없는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그렇지만 이승만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삼갔다.

예의를 차릴 정도로 점잖은 국면은 오래 가지 않았다. 사태의 발단은 「공산당에 대한 나의 관념」이라는 이승만의 방송연설(1945/11/21)이었다. 이에 맞서 박헌영은 「통일 방해자는 그대, 노파시스트 이박사를 폭로함」(1945/12/25)을 통해 이승만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한다. 이승만을 비판하는 명분도 애국이었다. 자신들은 그동안 이승만의 해외 유랑생활을 동정하여 용서했지만 이제는 조선의 민주주의 건설과정에 일대 모욕을 감행하는 이상 “조선의 애국자의 이름으로 그의 정체를 천하에 선명(宣明)하지 않을 수 없다(2: 122)”는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을 귀국 후 “‘대동단결’이라는 미명 아래 민족반역자와 친일파를 적극 옹호하고 자기 주변에 결집”한 “민족반역자 및 친일파들의 구주(救主)(2: 122)”, “나치의 괴뢰에 맞먹는 노파시스트(2: 124)”라고 비난하였다. 그렇지만 더 이상의 극단적인 용어는 삼갔다.

신탁통치와 미소공동위원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1946년 1월 이후부터 이승만과 우익에 대한 비판은 한층 더 격렬해졌고 반공반탁운동을 주도하던 김구도 본격적인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1946년 3월 27일 UP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역사진행에 역행하는 반동분자는 몰락한다」)은 이승만과 우익 비판

의 종합판을 보여준다. 즉 이승만은 ‘친일파 옹호’, ‘노동자 농민을 근거 없이 중상’, ‘반공 반소 반민주주의 연설을 방송’, ‘3상회의 결정 반대’, ‘조선공산당이 조선에 공산국가를 세우려고 한다는 음모적 데마를 선동’, ‘테러 조장’, ‘미국에 위임통치제를 자원 하는 등 “사회발전의 법칙을 거스르고 역사의 수레박회를 뒤로 역행시키려는 시대에 뒤떨어진 완고 반동정치(2: 684-85)” 를 펼치려는 인물로 묘사했다. 그리고 김구의 임시정부는 ‘일개 유氓(流氓)정치 뿌로카의 집단’, ‘무원칙한 파벌싸움으로 세월을 보낸’ 집단, ‘조선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인민 속에 토대를 갖지 못한’ 집단, ‘시대에 뒤떨어진 완고한 보수적 반민주주의자들’ 이라고 깎아내렸다.

이런 비판은 점차 심해져 1946년 6월에는 이승만과 김구가 해방 후 국내에 들어와서 한 죄악은 “친일파의 두목 김성수, 장덕수, 윤치호에 못하지 않은 아니 그 이상 용서 못할 민족반역의 죄악을 감히 범한 자(2: 359)” 라고 비판했다. 1946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맞아 가진 기자회견(「외국의 자본투자지로 조선독립은 유린」)에서는 거액의 차관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계획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획책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리승만(또는 우익 반동두목)의 식민지화 노선은 이완용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2: 758)” 이라면서, 한반도에서 가장 꺼리는 이름인 이완용에 비유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48년 7월 2일에는 단독정부 수립을 주도한 한민당과 이승만은 “조선을 미제국주의에 팔아먹는 매국노들의 집단(3: 89)” 이며, 이승만은 ‘민족반역자’, ‘매국노’, ‘제2 이완용’, ‘조선 인민의 원수’ 라고 규정하였다.

박헌영은 민족주의적 수사를 동원하여 자신들은 애국자와 민족자주세력으로 내세우는 반면 우익은 매국노이자 제국주의의 ‘개’ 로 묘사하였다. 그가 우익을 비판하는 용어들을 보면 친일파, 민족반역자, 일본제국주의의 대변자, 역사의 흐름을 거슬리려는 반동분자, 국제정세에 무지한 국수주의자, 봉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완고한 파시스트, 지주와 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무리, 비양심적 인간, 인면수심,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자들 등 온갖 수사가 총동원되었다. 그 중에서도 비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민족주의 수사법이 단연 으뜸이었다. 그것은 이승만과 우익을 친일파·반동특권계급·매국노로 규정하여 민족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자신들만이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의 이념, 민족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담당하는 체제이념이라는 주장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데 더 없이 유용했기 때문이다.

4. 미래 민족국가의 전망

박헌영은 민족주의 수사를 활용하여 역사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민족의 범위에서 우익을 배제하고 공산주의자가 현재와 미래의 주도세력으로 나서야 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때 조공의 비판전략은 우익의 배후에 있는 숨은 동지나 의도를 파헤치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해방공간에서 좌우는 서로 상대방의 숨은 의도나 계급적 이해관계를 폭로하며 자신의 사상은 민족과 국가의 발전이라는 민족주의적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사상인 반면, 상대방은 민족의 이름 아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지만 사실은 반민족적이라는 비판을 퍼부었다. 대립되는 이념의 사상적 내용이나 논리적 정합성이 아니라, 그 이념을 내세운 주도세력의 정체와 그 안에 숨어 있는 실제 의도를 폭로함으로써 그 사상의 결격사유를 설명하는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이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민족’의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유일하게’ 올바른 이념으로 내세우고 현실을 장악하려면 그들이 그려내는 민족과 민족국가의 미래상이 추가되어야 한다.

박헌영은 해방정국에서 사회주의의 구체적 전망에 대해 진지하게 밝힌 적이 없다. 물론 해방공간에서 조공이 현 단계의 목표로 설정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예비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박헌영과 조공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이룩되는 ‘부강한’ 민족국가의 미래를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1945년 11월 30일 최초의 방송연설에서 그는 “우리 민족이 잘 살고 보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2: 99)” 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하였다. 심지어 1946년 3.1절을 맞아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발표한 방송기념사에는 “남과 같이 우리도 자유롭게 행복스럽게 살아봅시다(2: 215)” 고 했는데, 박정희가 임기 내내 강조하던 말이었다.

박헌영은 토지개혁,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등 중요문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도 민족국가의 미래를 동원하였다. 1946년 1월 24일 중앙방송의 방송연설(「오

늘 정세와 우리 민족의 살 길)에서는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 결정은 조선에 남아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를 없애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조선을 튼튼한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임시조선민주주의정부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 선진국가의 수준에 속히 도달할 수 있는 것(2: 165)” 이라고 했다. 또한 「3.1운동의 의의와 그 교훈(1947)」에서는 조선인민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모스크바 삼상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영구히 위대한 선진적 민족으로 살아야 한다(2: 577)” 고 하면서 ‘선진국’ 이 되는 길로 연결시켰다.

토지개혁도 마찬가지였다. 1946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 창건 21주년 기념식사에서 그는 미국 영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는 벌써 백여 년 전에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부강한 국가로서의 발전이 있었던 것(2: 274)” 이라고 하며 토지개혁을 부국강병과 결합시켰다. 또한 1946년 6월 18일 정례 방송용으로 작성된 원고(「토지개혁은 민주독립의 초석」)에서도 토지개혁을 하면 모두 부지런히 일하여 “백성들은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며 배를 두드리며 살 수 있는” “예전의 요순시절이 다시(2: 373)” 올 것이라는, 전혀 공산주의자답지 않은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장 문명한 민족으로서 열국(列國)과 같이 민주주의국가군(群)에 참여(2: 374)” 하게 된다고 하며 토지개혁을 미래의 선진국, 부강한 나라, 문명국,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필수적 조치로 규정하였다.

이승만의 방송연설(1946/3/21)을 반박한 「이승만씨의 ‘데마’ 를 폭로한다(1946/3/26)」에는 이런 모든 생각이 집약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박헌영은 토지개혁이 조선의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여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 생산력을 발전시키려는 “동포가 다 같이 잘살자는 민족애적 입장에서(2: 227)” 나온 것이라고 하며 토지개혁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국제정국에서 진보적 역할” 을 하는 국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부흥” 된 국가, 세계평화와 진보와 번영을 위하여 싸우는 “훌륭한 민주독립국가”, “반만년역사와 찬란한 우리 문화를 다시 살리는 일류문명국(2: 228)” 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약하자면 조선의 미래는 완전독립국,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 찬란한 문화가 발전한 문명국, 비약적인 경제발전,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을 선망하고 있었다. 박헌영은 철저하게 ‘부강한 민족국가’의 비전을 갖고 미래상을 그려냈으며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개혁을 비롯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정당화하였다. 반면 우파의 이념은 ‘망국’ ‘민족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릇된 길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을 민족국가의 미래와 현재를 장악하는 체제이념으로 내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5. 계급의 논리

박헌영과 조공은 민족주의 담론과 수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민족해방과 독립국가건설의 이념으로 공산주의를 내세우며,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하고 모든 세력과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실천 측면에서는 전혀 달랐다. 해방 직후 이승만을 수장으로 삼고 ‘전 민족을 망라한’ 인민공화국을 결성했으나 막상 그 내용은 좌익 일변도였으며 민족주의자와의 통일전선 결성 방침조차 갖고 있지 못했다. 그들의 담화와 성명은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민족통일전선의 당위성을 내세웠으면서도 실제로 그들이 인정하는 협동의 대상은 ‘진보적 민주주의자,’ 즉 조선공산당의 노선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었다.

공산당이 기껏 해낸 것은 사회주의계열의 3당합당이 전부였다. 또한 몇몇 문건을 제외하고는 46년 후반 이후에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인민민주주의’ 혹은 ‘인민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이완범 2009, 308). 인민민주주의는 그가 민전 중앙위원회의 연설(1946/4/20)에서도 밝혔듯 동유럽에서 발전되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 즉 ‘인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급들이 영도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비록 그가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회주의혁명을 이미 전제하고 그 예비작업을 완수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사실상 부르주아지와 의 협동전술을 포기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민족과 계급이 갈등을 일으킬 때 박헌영과 조공은 민족협동전선의 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민족주의적 과제

를 주저없이 포기한 채 계급노선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필자는 박헌영과 조공의 민족담론을 대중을 장악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위장’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월북 이후부터 처형까지 그가 남긴 문건에도 여전히 민족담론이 압도하고 있었다. 필자는 계급과 민족의 갈등을 메우려는 진지한 고민 없이 계급노선으로 귀결된 이유를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과도한 ‘이론적 자신감’에서 찾고자 한다. 그들은 계급노선이 2차대전 이후 ‘세계사의 방향’에 따른 진보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주의혁명은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이미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았다. 계급과 민족이 충돌할 때 박헌영과 조공으로 하여금 계급실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것이 바로 이 자신감이었다. 이것은 두 종류의 문건에 잘 나타나 있다. 계급과 민족의 충돌을 계급논리 안에서 해소시키며 자신들의 최종목표와 계급실천으로의 전환에 대한 근본지침을 마련한 문건이 「8월테제」였고, 마르크스주의의 틀을 통해 조선에서 사회주의혁명의 필연성을 주장한 동학과 3.1운동 분석은 「테제」를 떠받쳐준 또 다른 문건이었다. 먼저 「테제」부터 검토하기로 하자.⁷⁾

「테제」의 모든 세부적 내용을 지명하는 근본논리는 ‘국제노선’, ‘세계사의 방향’, ‘진보적 민주주의’ 세 가지였다.

첫째, 해방은 진보적 민주주의국가인 연합국과 파시스트 국가들 사이의 전쟁인 2차대전의 종전 이후 국제문제 해결의 일환으로서 실현되었다. 따라서 한 나라의 문제는 ‘국제노선’에 의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헌영은 신탁통치와 미소공동위원회 결의를 모두 국제노선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하였다. 예를 들어 민전 제2회 중앙위원회에서의 연설(1946/4/20)은 현재 세계를 지도하고 있는 ‘스탈린 루스벨트 노선’은 “전후 세계를 재건하는 지도이념이요 식민지문제해결의 지침(2: 299)”이라고 하면서, 미소공동위원회는 이러한 정신에 따라 개최된 조선 문제의 해결에 가장 옳은 조치임을 역설하였다. 그런데 국제노선은 일제강점기

7) 「8월테제」는 조선공산당 재건파의 정세론과 혁명론을 집약한 문건이지만 그 작성과 최종 완성에 이르기까지 박헌영의 영향력이 깊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박헌영과 조공’의 문건으로 넣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코민테른 노선’과 같은 말이었다. 조공 해체 이후 조선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국제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그 노선에 따라 당을 재건할 것을 서약했다.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해방공간에서 미소의 협조가 붕괴되고 냉전이 강화되던 1946년 중반부터 조공이 ‘루스벨트 노선’을 버리고 ‘스탈린 노선’을 따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⁸⁾

둘째, “국제파시즘의 전면적 궤멸과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승리는 세계혁명을 더욱 높은 정도로 발전시키고(「8월테제」, 5: 53)” 있으며, 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파시즘이냐? 민주주의냐?(5: 53)”는 선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세계사의 방향이다. 그리고 “세계혁명 발전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수한 나라 즉 조선과 같은 데에 있어서는 평화적으로 혁명의 성공이 가능하다는 실례를(5: 52)” 소련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조선에 수립되어야 할 정치체제는 세계사의 방향에 따라 이미 사회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현 단계에서는 그 예비작업을 완수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임무를 가지게 되고, 이 노선에 동의하는 세력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해방공간에서 박헌영은 처음에는 민족반역자와 친일파를 배제했다가 정국이 과열되고 좌우대립이 격화되며 차차 반동적 우익, 이승만과 반동우익, 이승만·김구와 반동우익, 마지막에는 우익일반으로 그 배제의 범위를 넓혀갔던 것이다.

셋째,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명분은 그것이 보다 진보적이며 인민의 실질적인 삶을 옹호한다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논리였다. 조선공산당은 민주주의 정부는 인민의 행복과 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생활개선과 경제적 복리향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때 공산당의 강령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 인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로서 토지개혁, 산업발전을 위한 중요산업의 국유화, 진보적 노동법령 제정 등의 문제

8) 이 글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박헌영과 조공의 경직된 계급노선에는 소련과 북한의 변수도 큰 몫을 차지한다. 반탁에서 신탁으로의 전환에 소련이 깊이 관여한 점(이완범 2005)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광서의 연구가 보여주듯 소련이 조선공산당의 행동과 노선을 일일이 간섭한 것도 아니고, 소련의 지도력이 전일적으로 침투되지도 못했다. 소련과 조공의 관계, 조공의 실천노선에 소련의 영향력 등은 여전히 논쟁이 많고 앞으로 추가 자료 발굴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였다. 이것은 또 서구식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척도였다. 이와는 반대로 “해외에 있는 망명정부와 결탁하여 가지고 저 미국식의 데모크라시적 사회제도건설을 최고이상으로 삼는(「8월테제」, 5: 55)” 한국민주당의 ‘형식적 민주주의국가’는 실제로 지주와 대자본가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테제」의 기본방침에 따르면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이 ‘파시즘 잔존세력’, 이승만이 ‘노(老) 파시스트’로 규정되고 그들의 의도가 “해골만 남은 형식의 민주주의(「공산당 대표 정경방송」 1945/11/30, 2: 99)”를 지향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을 때 더 이상의 협동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8월테제」는 이 모든 것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괄하며 한국(조선)에서 공산주의가 민족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체제답론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테제」의 논리에서 사회주의의 필연성과 필요성은 세계사의 방향, 국제노선,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거시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의 밑바탕에는 역사발전의 필연성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정식(定式)이 깔려 있었다. 이것은 박헌영이 3.1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여실히 나타난다.⁹⁾ 그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한 사회의 혁명적 정세를 역사적·유물변증법적으로 취급한 “절대적 진리”, “가장 진보적이며 부동(不動)한 진리이며 인류발전사의 필연적 법칙(「3.1운동과 그 교훈」, 2: 563)”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진리’에 입각하여 조선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이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으로 전개 ‘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3.1운동은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는 농민해방의 토지개혁, 정치적 자유와 8시간노동제의 실시 등 기본적 민주적 과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민족혁명, 반봉건혁명, 반제국주의혁명,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 복합적으로 연결 추진 ‘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역사를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절대적 진리’에 따라 ‘예정

9) 「10월인민항쟁」 「3.1운동의 의의와 그 교훈」 「동학농민란과 그 교훈」의 3부작으로 『동학농민란과 그 교훈』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47년 출간되었다. 직접적으로는 10월항쟁을 정당화하는 목적을 갖고 서술되었지만, 이론적으로 본다면 「8월테제」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론을 조선의 역사 속에서 정당화하는 측면도 함께 갖고 있다.

된 혁명론'으로 해석한 데 불과하다. 즉 그에게 사회주의혁명론은 한국(조선)의 어떤 내적 필연성이나 필요성에서 옹호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보편이론에 따라 이미 1890년대부터 '이론적 당위성'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우파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동원했던 민족주의 담론은 실종되고 경직된 계급논리에 따라 혁명의 당위성을 역설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박헌영은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확신하며 오직 조공의 방침에 따라 민족협동전선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였다. 이승만과 한민당은 물론 중도파와의 통일전선을 거부했고, 신탁통치와 미소공동위원회 결정을 지지했으며, 마침내는 미국을 제국주의국가로 규정하고 극좌모험노선으로 돌아섰다. 민족과 계급의 논리가 충돌할 때 계급노선을 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공의 계급노선에 대한 대가는 '매국노'라는 비난이었다. 특히 신탁통치 지지로 돌아선 후 조공은 더욱 그러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1946년 1월~2월 사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며 살포된 '빠라'에는 '조선의 영원한 노예화를 음모하는 공산당', '민족반역자 매국적(賊)', '매국노 박헌영', '전 민족의 원수', '악마 박헌영 허헌 여운형 타살(打殺)', '매국노 공산당(김현식·정선태 편, 186-98)'이라는 비난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헌영은 이런 비판에 대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은 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발전을 위해 '유일하게 옳은 노선'이라고 맞서며, 자신들을 그 누구보다도 민족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애국자 공산당'으로 내세웠지만 상당 부분 대중의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었다.

6. 계급과 민족의 긴장: 해결된 문제?

필자는 한국 사회주의가 민족주의의 중층결정이라는 바탕 위에 서있다고 보면서, 해방공간의 공산주의가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중을 설득하며 민족국가의 미래를 담당하는 세력임을 주장함으로써 체제이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작업을 '공산주의 한국화'로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8월 테제」와 신탁통치 문제 등이 보여주듯 박헌영과 조공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국제노선', '세계사의 방향', '실질적 민주주의' 등을 앞세우는 계급논리를 따르

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들은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철저하게 민족주의의 수사를 빌려 설파했지만, 계급문제를 민족주의 담론 안에서 풀어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았다.

조공이 끝내 계급노선에 빠져들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내내 탄압을 받음으로써 대중 속에서 실천노선을 점검받을 기회를 상실했다(서중석), 일제강점기에는 코민테른의 노선에 종속되었고 해방 후에는 소련의 외교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최규진; 류승완), 일제강점기부터 좌익 스스로 우파와 통일전선을 거부하여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과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지수걸), 포용력을 상실하고 편협성을 보인 지도부의 무능력(김남식), 투쟁노선 자체의 문제(정병준) 등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이 없을 정도이다.

철향(贅言)을 무릅쓰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에게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과제’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12월테제」로부터 출발한다. 1928년의 「12월테제」는 해방될 때까지 한국 공산주의운동을 규정했던 기본지침이었으며 「8월테제」에까지 깊은 영향력을 남겼다. 이 테제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민족부르주아지는 민족혁명을 배신한다는 것, 사회주의를 제외한 어떠한 정치세력도 민족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약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민족혁명은 노동계급 전위당으로서 공산당이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방안을 가지고 농민을 지도할 때에만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갖고 있었다. 곧 공산당의 지도 아래 민족혁명과 계급혁명이 하나가 되면서 노동자·농민의 계급역량의 강화가 민족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되면서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민족혁명가인 동시에 계급혁명가가 되었다. 류준범의 지적대로 이들은 민족혁명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정치세력과 연합전선을 만들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며 노동자·농민의 일상투쟁에 사회주의자들이 결합하여 대중의 투쟁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민족혁명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자치운동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민족부르주아지의 ‘배신’은 그들의 생각을 굳히는 데 일조하였다. 이런 인식 아래 30년대 사회주의자들은 공장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인민대중 속으로 활동무대를 옮기고, 다양한 민족주의 세력과의 어떠한 정치적 연합도 반대하였지만, 민족혁명이 계급혁

명 속으로 해소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민족혁명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었다(류준범, 112-15).

여기서 보듯 식민지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해방투쟁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져야 하는 2단계 연속혁명론의 일환이었다. 식민지와 해방공간에서 이 과제의 수행을 위한 사회주의의 기본전략은 ‘독립국가 수립, 자본주의 단계로의 발전, 사회주의로의 성장·전환’로 압축될 수 있다. 민족해방투쟁 국면에서는 민족 부르주아지와 연대하면서도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독립성을 지켜야 하고, 민족해방 이후에는 부르주아지와 자본주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최종적으로는 부르주아지·민족·자본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사회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노선은 대단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모순되는 과제들을 한꺼번에 떠안고 있었다. 독립국가 건설에는 민족의 비전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독립국가의 사회경제적 내용은 계급과 민족의 논리가 혼합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 전담에서는 계급적 세계관이 강조될 것이다. 류승완의 말대로 “민족해방투쟁이 성공하려면 민족주의의 영향을 확대해야 하고,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하려면 민족주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의 영향을 최대화해야 한다(류승완, 69).”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의 사회주의자들은 민족혁명을 사회혁명 속으로 해소시킴으로써 계급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과연 이 둘이 하나의 과제로 통일될 수 있을까 하는 복잡한 문제들은 모두 방기되었다. 그리고 민족과 계급이 충돌할 때 계급노선을 지지하며, 오히려 그것이 민족혁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2월테제」의 인식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해방공간의 공산주의자들 역시 민족의 95%를 차지하는 인민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하며 민족과 계급의 이익을 일치시켰다. 박현영과 조공은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방안을 갖고 프롤레타리아의 헤게모니 아래 농민을 지도할 때에 계급혁명과 토지혁명은 일치하고, 민족문제는 계급문제의 틀 속에서 해소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 두 개의 과제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8월테제」를 통해 계급노선에 이미 우선권을 부여했던 것이다. 우파와의 민족협동전선을 거부하고, 민족과

계급이 충돌할 때 계급노선에 선차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모순되지 않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 대가는 컸다.

III. 결론: 사회주의의 한국화

필자는 지금까지 해방공간에서 박헌영과 조공이 민족주의 담론과 수사를 빌려 자신들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족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주역으로 내세움으로써 체제이념이 되고자 했던 시도를 공산주의의 한국화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해방공간의 좌우 이념대결을 민족주의 담론 속에서 펼쳐진 애국자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며 민족의 신성화, 우익과 이승만 비판, 민족국가의 미래상을 펼쳤던 좌익의 구체적 논리를 분석하였다. 필자는 이 국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과 민족국가건설 방안은 민족주의로 정당화하였지만, 다른 한편 사회주의혁명이라는 최종목표, 그리고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은 민족의 내적 필요성이 아니라 사회주의 이론 틀 안에서 당위성의 차원으로 주장되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의 기원을 「12월테제」로 소급하며 민족과 계급의 충돌은 계급적 실천의 승리로 마감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박헌영과 조공의 담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측면에 대한 고려가 보완되어야 한다. 필자는 계급논리와 민족논리의 관계가 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민족통일전선이 이루어지며, 그 실천 과정에서 다시 이론이 수정됨으로써 주변부 식민지 조선(한국)의 현실에 맞는 이론과 실천이 정립되어야 공산주의의 한국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글의 논점이 이론 측면에 맞추어지면서 박헌영과 조공의 실천 활동이 심도 깊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박헌영과 조공의 구체적인 실천활동, 미군정의 좌파에 대한 정책변화에 따른 실천노선의 변화, 이론을 둘러싸고 존재하였을 조공 내부 혹은 북조선노동당과의 노선 갈등 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문제 하나하나가 별개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은 한계를 갖고 있다.

해방정국의 공산주의는 민족과 계급의 충돌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공산주의의 한국화’에 실패했지만 결정적 요인은 미군정과 우익의 압도적 무력 때문이었다. 필자는 좌경노선으로 전환하며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게 된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를 그들의 이론체계에서 찾았지만, 그것은 해방공간에서 계급과 민족의 긴장 관계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정당성의 측면에서 손상을 입고 보다 광범위한 대중동원에 실패하게 된 내재적 문제점을 찾고자 한 것이지, 이론의 완성도가 현실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무력에 의해 전면 패퇴하여 지하로 잠복했던 공산주의는 자신이 원하던 체제이념으로 정립되지 못했고 대중의 지지 또한 상당 부분 상실했지만 저항이념으로서의 위치는 확실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또한 10월인민항쟁, 4.3 등의 사건이 보여주듯 대안이념으로서의 위치도 상당 부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주의의 한국화’ 제1차 국면의 시말이다.

분단과 전쟁을 겪고 사회주의는 ‘북한 공산주의’와 같은 이름으로 규정되며 좌익 잔존세력은 대부분 처형되었고 그 일부가 간신히 지하에 남아 있었다. 철저한 냉전구도 속에서 1950년대와 60년대의 조봉암과 혁신계는 민중의 생활고 개선, 민주주의 실현, 부정부패 일소, 평화통일을 사회민주주의 아래 포괄하며 사회주의를 대안이념 혹은 최소한 저항이념으로 세우고자 했다. 그들은 반공을 내세워 북한과의 관련성을 차단하고 계급의 논리를 철저하게 배제했다. 혁명은 거세되었고 민족 혹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을 정책적 지향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조봉암은 체제이념의 이름으로 사형 당했고 혁신계는 5.16 이후 주저앉았다. 사회주의는 대안이념으로서도 저항이념으로서도 나서지 못하고 소수의 추종자들에게만 맥을 이어 지하로 다시 잠복하게 되었다. 이것이 제2차 국면이다.

그 이후 간간이 ‘혁명당’ 사건으로 얼굴을 내밀던 사회주의는 80년대에 들어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근본원인을 자본주의의 모순과 분단구조에서 찾으며 격렬한 혁명의 논리를 전개했던 제3차 국면으로 들어선다. NL과 PD로 상징되는 이 시기의 급진이념은 노동계급을 축으로 하는 ‘민중’을 동원 대상으

로 삼으며 민주화를 넘어선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지향함으로써 자신을 대안이념으로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념은 민주화 운동을 촉발하는 저항이념의 차원에서 대단히 효과적이었으나 대안으로 서지는 못했다. 1980년대에 거리를 가득 메운 한국의 '민중'은 민주화에 멈추었고 87년의 노동자 대투쟁은 사업장의 작업조건 개선, 민주노조 인정, 임금인상 등의 개량적 조치에서 멈추었다. 또한 계급과 민족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 한쪽을 강조하는 두 개의 노선으로 갈라섰다.

1990년대의 일시적 침체를 극복하고 꾸준히 사회주의를 내걸고 운동을 진행했던 세력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민주노동당이라는 결실을 맺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 제4차 국면은 앞의 국면들을 일정 부분 계승하고, 그것을 새로운 현실에 속에서 각색·변용하며 사회주의를 다시금 대안이념으로 만들고자 분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 중 일부는 그들의 주장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 계급이나 민족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사회구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저항이념으로서의 위세도 전만 같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분단 이후 가장 큰 활동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는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해방 이후 사회주의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 시점의 한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가장 호소력이 있는 언어로 포착하여 체제이념 혹은 대안이념으로 올라서고자 했다. 각 국면마다 사용 언어·수사·담론 틀·문제제기 방식은 달랐으며, 그들이 포착했던 문제와 언어가 항상 성공적이지도 못했다. 필자는 이들 국면에 대한 고립된 연구를 지양하고 한국 사회주의에 대한 통시적이며 일관된 분석 틀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을 관통하는 틀을 '사회주의의 한국화'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국면에서 체제이념 혹은 대안이념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이 구사했던 담론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주의의 한국화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담론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 각 국면에서의 담론전략, 그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던 과제나 문제점을 총괄하는 일관된 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 첫 단계에 해당하는 해방공간에서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의 담론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인. 미출간.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주의 담론: 민족과 국가의 강고한 결합에 기초한 반공·근대화 민족주의.”
- 국사편찬위원회. 1968. 『자료 대한민국사 1』. 서울: 문교부.
- 권보드래. 2004. “동포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성.”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개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97-126. 서울: 소명.
- 기광서. 2003.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에 대한 소련의 입장.” 『역사비평』 65: 227-48.
- 김남식. 1985. “박헌영과 8월테제.” 강만길 편. 『해방전후사의 인식 2』 104-42. 서울: 한길사.
- 김무용. 2001. “한국 근현대 사회주의운동, 이상과 현실.” 『역사문제연구』 7: 163-203.
- 김현식·정선태 편. 2011. 『빠라로 듣는 해방직후의 목소리』. 서울: 소명.
- 류승완. 2006. 『이념형 사회주의』. 서울: 선인.
- 류준범. 2000. “1930-40년대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민족혁명에 대한 인식.” 『역사문제연구』 4: 101-31.
- 박치우. 2010. 『사상과 현실』. 인천: 인하대학교 출판부.
- 박헌영. 2004. 『이정 박헌영 전집』. 서울: 역사비평사.
- 서중석. 1996.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안태정. 2003. “해방 이후 사회주의자들의 노동대중을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 『지구화 시대 맑스의 현재성』 2: 117-39.
- 여현덕. 1987. “8.15 직후 민주주의 논쟁,” 박현재 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23-75. 서울: 한길사.
- 이미숙. 1989. “박헌영 남로당에 대한 비판을 비판한다.” 『역사비평』 7: 256-76.
- 이석태 편. 1948. 『사회과학대사전』(영인본).
- 이완범. 2005. “조선공산당의 탁치노선 전환 이유.” 『정신문화연구』 99: 161-85.
- _____. 2009. “광복 직후 좌익의 혁명론.” 이인호 편.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247-321. 서울: 기파랑.
- 이지원. 2007.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서울: 혜안.
- 정병준. 1989. “박헌영 남로당 노선 무엇이 문제인가.” 『역사비평』 7: 277-303.
- 지수걸. 1988. “1930년대 초반기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개량주의운동 비판.” 학술단체연합회.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대계와 전망』 266-92. 서울: 역사비평사.

최규진. 1996. “코민테른 6차대회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하상복·김수자. 2009. “민족주의.” 강정인 편. 『한국정치의 이념과 사상』 202-58. 서울: 후마니타스.

『주보 민주주의』.

『현대일보』.

투고일: 2012.08.15 심사일: 2012.10.10 게재확정일: 2012.10.12

【ABSTRACT】

Park Hun Yeong in the Liberation Period (1945-48): the Koreanization of Communism

Jung, Seung Hyun | Sogang University

The Korean left has tried to establish socialism in Chosun(Korea) since 1920's. I call that effort Koreanization of socialism, which means its original theory and practice should be adapted for Koreans to be approved as dominant or alternative ideology. Its history can be divided into four phases and this paper examines the first stage, i.e. the liberation period focusing on Park Hun Yeong and the Chosun Communist Party. Especially I examine the conflict between its nationalist discourse and class oriented practice, and try to illuminate this conflict was the one of major factors for explaining their defeat. I find the source of this conflict in their theory which was profoundly affected by Comintern in the late 1920's. Finally I explain their theoretical confidence prevented the nationalist united front and made the inflexible class practice line.

Key Words | socialism, communism, Park Hun Yeong, nationalism,
Liberation period